신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3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8월 28일 (음력 7월 5일) 월요일

첨단과학 인재들 광주를 선택했다

광주과기원 석·박사 32% 지역 취업…매년 급증 추세

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기원) 출신 첨단과학 인재들의 역외 이탈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과기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만 해도 석사학위 취득 후 타지역 대학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떠난 학생이 30.4%에 달하면서 광주과기원 박사과정 진학률이 69.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년 77.1%, 2003년 83.6%, 2004년 78.7%, 2005년 77.2% 등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 전기 85.5%, 후기 92.3%로 최근 1년 새 급증했다.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취업자 중 광주과기원 내 연구기관이나 지역 기업, 대학 등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2년 석사의 경우 94명 중 3명, 박사는 34명 중 5명이 각각 우리로광통신, LG이노텍, 순천대·조선대 등에 취업하는 등 석·박사 학위 취업자 중 지역 취업률이 6.3%에 그쳤으나 2003년 9.8%, 2004년 8.8%, 2005년 17.9%, 올 전기 22.6%로 매년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올 후기의 경우 석사는 19명 중 7명(36.8%), 박사는 18명 중 5명(27.8%)이 각각 지역에 남아 지역 취업률이 32.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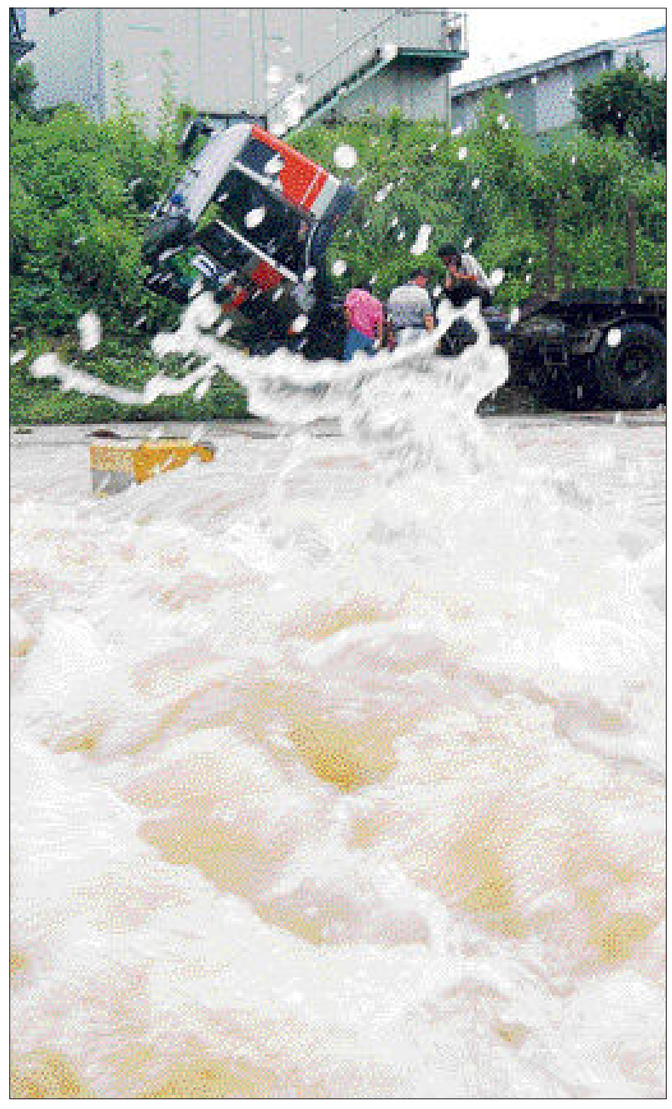
이처럼 광주과기원 박사과정 진학자 및 지역 취업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광주과기원의 졸업생 수용능력이 커진데다 취업 가능한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광주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과기원의 경우 지난 1998년 정부지원 예산이 156억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70억 원으로 3배 늘었고, 교수나 연구팀이 각종 연구 프로젝트로 유치한 기금도 지난 1998년 71억 원에서 2006년 347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삼성광주전자, LG이노텍,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 생명현상기능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등 대기업이나 국가연구소 등이 잇따라 광주에 들어서면서 광주과기원 출신 인재의 취업 문이 넓어졌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지역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지역 진학률 및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연구소의 광주지역 유치가 꾸준히 이뤄질 경우 지역에 잔류하는 졸업생이 더욱 늘고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폭우로 곳곳 범람 27일 새벽 광주지역에 내린 100㎜가 넘는 집중 호우로 인해 광산구 하남동 풍영정천이 넘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차와 버스 등 차량 9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관련기사 6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정社가 상품권제 주도"

한컴산 관계자 주장…檢, 이재웅씨 등 50여명 출금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게임장을 도박장으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과 인증제 시행 등은 특정 상품권 발행사가 기획하고 문화부가 연출한 합작품이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부 측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침체한 게임산업진흥 등을 위해 시행된 정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4·5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고위 관계자는 "2001년께 게임업체 A사의 대표가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쓰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며 "당시 A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던 한컴산 고위 간부가 문화관광부 실무자와 거의 매일 만나 상품권제 초안을 만드는데 간여했고, 이것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인증제와 관련해서도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4월께 문화부 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문화부가 상품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상품권 인증제 도입 방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 관계자는 "우리가 상품권제 도입을 위해 로비를 했다면 경품용 상품권 종류에 빠졌을 수 있겠느냐"며 "작년 인증제를 통해 처음 경품용 시장에 진입했으며 로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우종식 게임산업개발원장과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등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전 청와대 행정관 권모씨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영등위 관계자 등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다이야기' 제작·유통사의 900억원 수익금 중 용처가 불분명한 4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개별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넘어 폭력조직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오락실 및 성인 PC방, 게임 유통·제작업체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강화하고 게임 유통·제작업체의 조직적인 게임기 개·변조 행위, 각종 로비 및 뇌물 제공 의혹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美 "작통권 2009년 넘길것"

럼즈펠드 공식 통보…방위비 절반 분담 요구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12년을 환수 목표년도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력히 피력했다.

〈관련기사 3면〉

27일 서울의 복수 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럼즈펠드 장관은 이달 중순께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전시 작통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미국 국방 최고 책임자인 럼즈펠드 장관이 이양 목표연도로 2009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방위비는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며 "이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해 한국도 더 많은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사 손·호흡기 식중독균 범벅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일선 의사들의 손과 호흡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내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들을 비교할 경우 의사들의 손과 호흡기에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자료에서 밝혀졌다.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각 130명의 손과 비강(코 부위)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장구균, 대장균, 폐렴간균, 녹농균 등 5가지 균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손의 경우 의사들의 54.6%에서 검출돼 가장 많았고, 보호자는 46.2%, 환자 37.7%, 간호사 18.5%의 순이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바다이야기' 사태 관련 韓총리, 週初 대국민사과

한명숙 총리는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사태와 관련, 금주초께 대국민 사과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태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총리가 내각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뜻을 국민 앞에 엄중히 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 시기는 이번주 초가 될 것이며,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태가 될지 아니면 별도 기자회견 형식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